

# 위험은 외주화되고, 이주화된다...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서울서 '아리셀 중대재해' 추모 행동

조연주 기자 | 승인 2024.07.04 10:48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행동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행동이 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추모제를 열었다. 이 추모제는 화성시청 앞 추모제와 동시간대 진행됐다.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행동이 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추모제를 열었다. 이 추모제는 화성시청 앞 추모제와 동시간대 진행됐다.

화성 참사 현장과 화성 분향소까지 가지 못해 더 많은 이들이 서울에서도 모여 추모의 마음을 나눴다.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행동이 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추모제를 열었다. 이 추모제는 화성시청 앞 추모제와 동시간대 진행됐다. 이들은 “이어지는 참사에,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희생에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 더 분노하고 더 행동하기 위해 우리는 모이겠다”면서 발언을 이어갔다.

이주노조(MTU)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이 계속되는 것은 사업장 변경도 제한되어 있는 강제노동, 사업주 권리만 보장해주는 제도, 이주노동자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만 중요시 하는 사업주들의 태도 때문이다. 안전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영세 사업장 안전개선 지원을 해야한다”며 추모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모선우 활동가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땅을 떠나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한국에 왔을 모습이 눈에 선하다. 저 역시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국에 왔었기에 그 마음을 이해한다. 낯선 곳에서 적응하려고,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고생하면 희망을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힘겨운 노동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다”고 발언했다.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행동이 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추모제를 열었다. 이 추모제는 화성시청 앞 추모제와 동시간대 진행됐다.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행동이 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추모제를 열었다. 이 추모제는 화성시청 앞 추모제와 동시간대 진행됐다.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행동이 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추모제를 열었다. 이 추모제는 화성시청 앞 추모제와 동시대에 진행됐다.

중국동포단체연합대책위원회 박옥선 고문(CK여성위원회 이사장)은 "금번 참사 희생자 중 내국인이 5명(귀화 중국동포 1명 포함), 중국동포(한국계 중국인)를 포함한 중국 국적자가 17명, 그리고 라오스인 1명으로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의 피해가 유독 집중되고 심각하다"고 전한 뒤 "중국동포 제 단체는 지난 6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위를 구성하였으며 진상 규명 및 피해 지원에 진력할 것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설명한 박 고문은 "거듭 천명하건대 대책위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호소하지 않는다. 재난 앞에서 내·외국인이 겪는 피해의 무게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차별 없는 보상은 너무 당연하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이원화하여 접근하고, 유가족을 갈라치기 할 알량한 타산을 정부 당국이 혹여라도 갖고 있다면 진즉에 단념하기를 바란다"고 명확히 했다.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석원정 대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며칠 전 화성시청에 설치된 분향소와 공장을 방문했다. 분향소에는 영정도 위패도 없었다. 그저 꽃 수백 송이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가뜰이나 참담함에 가슴이 먹먹하던 차에 '그 어느 분의 사진도 이름도 없는' 분향소를 보니 저절로 탄식이 터져나왔다"고 한 뒤 "여러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보았지만, 이번 화성 아리셀 노동자분들의 죽음만큼 참담한 죽음은 없었던 것 같다. 23명의 노동자 사망, 그 중 18명 이주민노동자 사망. 이 화성 아리셀 사태는 한국의 중대재해사례에도 남겠지만, 이주민의 유입의 역사에도 길이길이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행동이 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추모제를 열었다. 이 추모제는 화성시청 앞 추모제와 동시간대 진행됐다.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행동이 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추모제를 열었다. 이 추모제는 화성시청 앞 추모제와 동시간대 진행됐다.

금속노조 이상섭 부위원장도 발언에 나섰다. 이 부위원장은 "자본 이동의 자유는 자본에게 더 많은 착취의 기회와 더 많은 이윤을 보장했지만, 노동자에게 이동이란 지옥을 경험하게 할 뿐이었다. 화재가 날지도 모르는 곳, 불법파견과 이중삼중 하청 다단계 저임금 착취구조 속에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없었다. 안전교육은 생략되고 위험성 평가는 허위로 작성됐다"면서 "참사 이후에도 원청은, 하청은, 파견업체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다. 정권과 노동부, 지자체는 자신들에게 불통이 될까봐 전전긍긍이다.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철폐, 다단계 하청구조 철폐, 산업단지 및 이주노동자 권리 쟁취,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며 명복을 빌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건희 활동가는 "험할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 내가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알 권리 등은 파견노동자라서, 이주노동자라서 보장되지 않았다. 자본과 국가는 영세업체기에 안전체계를 미비하게 해도 괜찮다는 면죄부를 주어 왔다. 여전히 리튬을 비롯한 신물질, 유해물질을 다루는 공장들은 운영되고 있고, 하청이라는 이유로 규제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한 뒤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으로 가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는 "이번 참사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이주화, 불법파견, 사람장사라는 말로 이를 표현되는 고용환경이었다. 이번 사건처럼 리튬전지처럼 폭발화재가 있는 물질을 다루는 위험업무는 더욱더 사용자의 안전조치 의무가 매우 중요했다. 안전배려의무는 원청에게도 있지만 직접적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피해 갈 구멍은 많다"고 지적했다.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행동이 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추모제를 열었다. 이 추모제는 화성시청 앞 추모제와 동시간대 진행됐다.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행동이 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추모제를 열었다. 이 추모제는 화성시청 앞 추모제와 동시진행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백종성 공동집행위원장은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숨진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 아리셀 자본은 이 나라 최고라는 로펌을 선임했고,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AI 소방기술을 운운하며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견을 확대해야 한단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라고 꼬집으면서 "아리셀 자본이 최소한의 안전 조치도 없이 노동자를 투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나,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되기 때문이었다. 안전조치를 하건 말건, 아무 권리도 없는 저임금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은 넘쳐나기 때문이다. 아리셀 노동자들에게 자신을 지킬 최소한의 권리가 존재했다면, 진짜사장에게 노동안전보건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애도했다.

발언을 마친 이들은 추모리본에 추모메시지를 적고, 서울고용노동청 앞~명동성당~롯데백화점 맞은편~을지로 입구 로터리~시청 동편까지 행진했다.

지난달 24일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이주노동자 18명 포함 23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화재참사가 발생했다. 희생자 다수가 중국동포 여성노동자들이었다. 노동자들은 정직원이 아닌 인력파견업체 소속이었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없었다. 위험한 유해물질을 다루는 공장이고 그 전에도 화재사가 발생했지만 안전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

